

# 최근 북한경제 연구 동향 및 평가<sup>1)</sup>

김양희 |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 사무관 | yang275@korea.kr

## I. 북한경제연구의 성과

그동안 북한경제분야 연구는 여전히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북한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경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보자면, 북한 당국은 공식적인 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대부분의 북한경제 연구자들은 교역 상대국들이 발표한 무역통계로부터 추출한 거울통계 방식을 활용해 만든 북한의 무역통계를 사용한다. 한국은행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생산량 데이터 또는 추정치를 제공받아 한국의 국민계정 체계에 대입하여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을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남북 접경지역 인근 작황 조사, 위성 데이터, 관계기관 첩보, 북·중 접경지역 작황 조사 등을 통해 북한 식량생산량을 추정했다. 접경지역 인근에 실제 북한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농사를 지어가며 관련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통계 조사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 한계이긴 하지만, 일부 북한 전문 매체들은 북한 내 주민들과 직접 통화를 해서 지역별, 품목별 북한 시장 가격 등을 시기별로 구분해 지속적으로 조사하며 통계자료로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노력 외에 최근에는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북한경제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방법들도 다수 시도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통계청에서 진행한 북한통계발전 분야별협의체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1) 이 글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기획재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북한 이산화질소 농도와 야간조도를 활용해 만든 북한 통계, KAIST는 위성 영상분석 AI모형을 통해 북한 경제발전 지표를 추정하는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위성 정보를 활용해 북한기업의 생산활동을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를 소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일부 기관에서는 위성 자료 및 선박의 항해 데이터를 가지고 북한의 선박을 활용한 불법 물류 거래 등 대북제재 회피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하는 등 폐쇄된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데이터를 하나씩 만들고 이들 데이터를 축적해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드는 데 아주 오랜 공을 들여야 한다. 최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북한경제분야의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는 북한경제 연구자들의 지난한 노력 덕분이다.

## II. 최근 북한경제연구의 현실

이렇듯 그동안 북한경제 연구는 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경제 관련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등은 물론이고,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국방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에서 국정과제를 비롯한 각종 대북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경제학계의 현실을 보면, 국책연구원의 많은 전문가들이 정년을 한 상황에서 이후 세대들의 연구자 수가 많지도 않고 연구기관별로 전문분야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도 않다. 이 같은 분위기는 대학의 북한 관련 학과에서도 감지된다. 이전에는 북한 관련 학과들이 여러 학교에서 만들어졌었는데, 최근에는 다른 전공들과 통합되기도 하고, 지원하는 학생 수도 대폭 줄어드는 등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북한학을 연구하는 대학들에서도 북한경제 전공 교수들이 이미 정년퇴임을 했거나 대부분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다. 퇴임 이후 새로운 북한경제전공 교수를 뽑을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채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북한경제를 비롯, 북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일까? 북한 연구가 선배 세대 때에는 중요한 학문이었다가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학문이 된 것일까, 아니면 선배 세대가 후배들을 전혀 키우지 않아서 관련 연구가 대물림되지 않는 것일까.

농촌경제연구원의 경우 수년 전부터 꾸준히 북한 주요 시장에서 농산품의 가격을 조사해 DB를 구축하고, 독립된 예산을 편성해 분기별로 『북한농업동향』을 발간해 데이터를 공개했다.

북한 사회에서 식량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북한에서 쌀 가격은 사회주의 기준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또한 이는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도 북한 주민들의 경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연구분야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공개가 많은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산업연구원의 북한 산업·기업 DB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북한의 노동신문에 보도된 기업소 등을 추출해 관련 기업목록, 위치, 동향, 보도빈도 등을 축적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북한산업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 작업을 하라고 하면 업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산업연구원 측의 노력 덕분에 북한산업 관련 연구는 한 단계 성장했다고 평가한다. 최근에는 산업연구원의 북한 산업·기업 DB에 해양수산연구원의 북한 해양수산 DB까지 함께 모아 공개하는 방향으로 DB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북핵 이슈의 악화, 북한경제를 비롯한 대한민국 사회의 북한에 대한 거부감, 충분한 예산 확보 미흡 등을 이유로 과제가 축소되거나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국책연구기관들의 북한경제연구 성과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장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북한 관련 기본연구과제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조직까지 축소되고 있다. 북한실태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현 정부에서는 대북정보 분석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되기도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북한경제 관련 연구 성과는 오히려 줄어드는 형국이다.

### III. 맺음말: 북한경제 연구의 필요성

북한경제분야 연구는 특히 국가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연구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기재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부처로, 통일 경제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부처이기도 하다. 대통령령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남북경제 교류·협력에 관한 장·단기 정책의 개발 및 조정’, ‘통일에 대비한 경제 분야 정책의 협의, 조정’, ‘남북경제협력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조정’, ‘광역두만개발계획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통일에 대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국제기구와 여러 대북경제정책을 논의하고, 향후 비핵화 등 여건 조성 시에 대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곳이다.

이에 기재부에서는 꾸준히 관련 북한 통계들을 모으고, 대북경제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기재부에서는 통일기반조성 사업으로 남북경제용어 비교사전과 북한경제용어 영문해설집을 발간해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해외의 북한경제학자들에게도 연구의 토대가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 주요 도시 경제 인프라 지도를 발간해 시각화된 경제 통계의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발간을 목표로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자료집’, ‘북한 경제 공식문헌 해제’, ‘북한경제 영문핸드북’ 등의 연구를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통일기반조성을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려고 한다.

독일이 통일된 지 30여 년 흘렀지만, 여전히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고 통일비용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 간 경제 격차가 통일 직전 동서독 간 격차보다 훨씬 큰 우리에게도 여러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당장 시급하지 않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조금 미뤄두자고 할 수 있다. 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외면하자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발등에 떨어진 현안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라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분야는 중장기 정책 수립뿐 아니라 현안에서도 할 일이 많다.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경협 추진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할 일이 많고 이제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연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북한경제 연구를 남북경협 연구와 동일시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는 담대한 구상의 실현이라는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위한 정책의 제시와 함께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8.15통일도кт린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의 실행을 위해 남북 간 분위기가 경색된 현 상황에서도 통일경제담론을 만들거나, 8.15통일도кт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북한의 비핵화 등 여건 조성 시에 대비한 대북경제정책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바뀌면서 대북경제정책의 방향성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북한경제 관련해서 해야 할 연구들은 너무 많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도 현재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실태 분석 연구이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경제교육과 함께 국제사회에 북한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연구들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당장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과 함께 여러 고민을 해야 하는데, 관련 연구를 함께할 박사들과 그동안 축적된 소중한 연구 성과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북한경제 연구의 토대가 무너지면 대북경제정책 관련 현안 대응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 미래의 청사진도 사라진다.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